

국가AI전략위, 유럽 주요 정책·노동계 인사들과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AI 전략’ 논의

- 유럽의회·독일 연방의회·유럽노총 등 고위급 대표단과 AI와 노동의 미래, 사회적 대화, 민주적 책임성 논의
- 기술·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민의 삶과 권리, 참여를 포괄하는 AI 전략 방향 공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9월 1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2026 노동의 미래 실험실」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만나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AI 전략 수립’을 주제로 한·유럽 간 AI 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는 니콜라 슈미트 유럽진보연구재단(FEPS) 이사장(전 EU 고용·사회적권리 담당 집행위원), 브란도 보니페이 유럽의회 의원(EU AI법 주보고자), 에스더 린치 유럽노총(ETUC) 사무총장, 가비 비숍 유럽의회 S&D 부의장, 아리카 클로제 독일 연방의회 의원 등 유럽의 주요 정책입안자와 노동계 인사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하정우 상근부위원장, 박태웅 공공AX분과장, 김의영 AI민주주의 분과장, 이동수 기술혁신·인프라분과 위원, 김영옥 산업AX·생태계분과 위원, 김경훈 사회분과 위원이 함께 했다.

양측은 국가의 AI 전략 수립에 있어 기술 경쟁력과 산업 성장뿐 아니라 고용, 사회적 불평등, 사회보장, 공공의 신뢰와 민주적 책임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AI 전환 과정에서 정부·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AI의 혜택과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말하며, 필수 사회서비스에 AI를 활용하고 ‘모두의 AI’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정우 상근부위원장은 “AI 경쟁력은 기술과 산업의 성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며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를 넘어 AI 시대에 기술과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외협력팀	책임자	팀 장	조재현 (02-2224-4141)
		담당자	사무관	홍 선 (02-2224-4144)

